

## 중부일보

2020년 07월 20일 (월)  
02면 종합

### 탈북민단체 2곳 법인 취소…道 “늦었지만 환영”

통일부는 지난 17일 대북 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다소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같은 조치는 경기도가 지난달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에 이들 단체를 수사 의뢰했고, 통일부와 서울시에서도 법인 취소 요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입장문을 통해 "두 법인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시은기자

## 기호일보

2020년 07월 20일 (월)  
05면 종합

### 도, 정부에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방안 적극 피력

경기도가 국가 주도 개발이 이뤄질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각종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19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사업비 8조2천777억 원(국비 6천500억 원, 지방비 9천338억 원, 민자 6조6천939억 원)을 투입해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한다. 도내에서 개발이 이뤄질 반환공여구역은 22개소 총 72㎢ 면적이다.

현재까지 반환이 완료된 미군공여지는 의정부 라과디아, 동두천 님블, 파주 그리브스 등 총 16개 캠프이며 의정부 잭슨, 레드클라우드, 스텐리 등과 동두천 케이시·호비(2천820만 ㎡), 교육 및 산업시설이 추

진 중이다.

도는 정부가 11월 중순까지 진행하는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용역'에 반영하기 위한 실현 가능성 높은 각종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국가 전담기구와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개발 사업비 및 전담기구 운영비 마련과 지자체 역량으로 개발이 어려운 일부 공여지에 대한 국가의 직접 위탁·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안보테마관광단지로 조성 중인 의정부 레드클라우드(83만6천 ㎡)와 국가 주도 지원도시 사업의 동두천 케이시·호비(2천820만 ㎡), 교육 및 산업시설이 들

어설 파주 자이언트·게리오웹(45만6천 ㎡) 등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소통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지자체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한 국비 지원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도 요구하고 있다. 미군공여지가 위치한 지자체를 방문하고 개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 용산공원 및 평택 지역 미군공여지 개발 지원과 같은 차별적 지원이 골자다. 이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와 개별법상 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높은 지가와 단순 매각 방식으로 인한 민간투자 기피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반환기지 6개소에 대한 반환 협상 절차 이행을 강력히 촉구 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